〔스크랩〕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성명〉

▶ 한겨레 (1998. 11. 5. 26면)

공공도서관 말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기도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 도서관계를 대표하여 모인 공공도서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국가적으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의 정보능력을 고갈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illegible] 지탱하는 근간

공공도서관은 18세기 시민혁명 이후 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등장한 시민세력들이 지식과 정보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한 사회장치이다. 즉, 공공도서관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지식과 정보의 공급원으로서 시민의 기본권(지적자유권, 알 권리, 문화향수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 장치인 것이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교육 지원, 지역문화활동, 정보, 레크리에이션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핵심사업은 지식자원 제공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정보와 정보전달 매체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도서관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자원 제공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지식자원 제공 기능을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의 비용('무료원칙')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봉사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도서관 명칭변경 시도는 지방교육청 관련 일부 공무원의 기득권 수호책

그러나 작금에 일부 교육청에서 소속 공공도서관을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평생학습관(평생교육문화센터)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시민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겠다고 하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 왜냐하면 이미 공공도서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기능은 도서관의 기본 기능 중 하나일 뿐임에도 도서관을 오히려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여타의 주요한 기능을 죽이고 단지 지엽적 기능만을 살리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관장의 사서직 보임을 회피해보려는 의도일 뿐임이 명백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법령에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바꾸어 달려고 하겠는가. 즉, 구조조정 과정에서 평생교육 증진이라는 미명을 내세워 공공도서관의 관장 자리를 유지해 보겠다는 알팍한 술수일 뿐이다.

공공도서관 없애려는 세계의 웃음거리

이미 세계는 이제 치열한 정보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결국 '지식과 정보'가 된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잘 짜여진 도서관 네트워크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사태가 그럴진대 어찌 우리 나라에서는 정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가. 교육청의 의도대로 공공도서관이 사라지게 된다면 결국 국가의 정보능력 고갈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와 시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공의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공공의 장치가 상실됨으로써 국가와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에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illegible]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제36회 전국도서관대회에 보내주신 메시지를 통하여 도서관인들은 「제2의 건국」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지식·정보산업이 근간이 되는 '창조적 지식국가의 건설'을 제시하고 지식과 창의력은 바로 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도서관의 수준이 곧 국력을 좌우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는 견인차가 되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는 공공도서관을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지역단위 핵심 종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2011년까지 750개관 목표로 공공도서관을 지속 건립하고 자료구입비를 증액 지원하는 등 지식정보시대에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확충 및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바꾸어 도서관 죽이기를 시도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의지와 국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의 비난과 책임을 두려워하라

우리 도서관계 일동은 그 동안 공공도서관 발전에 미온적이었던 관계 당국이 지금이라도 공공도서관을 없애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공공도서관 발전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며 시민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촉구한다. 만일 끝내 공공도서관의 명칭을 바꾼다면 두고두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빼앗아 감, 그로 인하여 국가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했다는 역사의 비난과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998년 11월 일

공공도서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서지학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전국사서협회	한국문헌정보학회
전문대학문헌정보학과교육협의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도서관협회	

▶ 대한매일 (1998. 11. 19. 24면)

공공도서관 죽이기 책략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일부 지방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진흥을 명분으로 내세워 공공도서관 일부의 명칭을 평생학습관 등으로 변경하고자 기도하고 있다. 도서관계를 대표하여 모인 우리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기도가 평생교육 진흥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실현을 앞두고 일부 공무원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간교한 책략임을 밝히고, 이같은 반 역사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1. 우리 나라는 도서관 후진국

우리 나라는 도서관 후진국이다. 수도 서울의 경우도 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21개 공공도서관이 있을 뿐이고, 그 중 10개 자치구에는 그나마 하나도 없다. 서울시민 38%에 이르는 4백여만명은 도서관 서비스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개 도서관이 자그만치 47만여명의 시민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소장한 자료도 겨우 335만 책으로 시민 1인당 0.34권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만명 이상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1,600만 책 이상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현실은 서울특별시가 여타의 문화시설 면에서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유독 공공도서관 분계에 있어서는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2. 공공도서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4개의 공공도서관(서울에는 6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도서관의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서울특별시 시민의 60%가 넘는 625만여명이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며 시민의 지식정보 활용 능력 및 문화복지수준이 더욱 열악해 질 것임이 명백하다. 특히 앞으로 지식정보화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생산기반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공공도서관이라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삶의 기반과 도구를 상실케 되는 것이다.

3. 공공도서관은 시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강화하려는 평생교육 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각종 강좌나 재교육 프로그램들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미 지금의 공공도서관에서도 도서관법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타의 문화기관이나 교육기관, 각 구민회관, 일부 백화점이나 언론사 등의 문화센터, 대학의 평생교육기관, 각종 전문학원, 나아가 초·중·고등학교의 열린 교실 등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시민들에게 좋은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와 평생교육 기반 시설은 공공도서관 밖에 없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을 강화하려면 공공도서관을 더욱 충실하고 발전시켜야 함이 마땅하다.

4. 왜 공공도서관을 없애려 하는가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경쟁력 있는 공공도서관을 없애고 대신 평생학습관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최근 경제위기와 교육청의 기능변화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육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장래가 달린 구조조정의 본래의 목적까지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겉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뒤로는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노리고 멋대로 시민들의 중요한 지식기관을 폐지시키려는 것이다.

5.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이중성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최근 한겨레신문사와 함께 '사회의 책을 학교로' 운동을 전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켜 학생들의 독서교육 강화와 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이제 교육청이 공공도서관 보다도 더 낙후된 학교도서관 살리기에 나섰다니 이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한 학교도서관은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IMF 시대를 맞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확충은 고사하고 아예 없애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6.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워라

이제 우리 정부나 교육관계자들, 나아가 모든 국민들은 '도서관의 수준이 곧 국력을 좌우'하고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말해주는 지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사회의 기본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도 도서관 없이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이제는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자세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한다. 공공도서관 확충과 서비스 활성화는 대통령의 국정의지이며 현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일부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

7. 우리의 요구

우리 도서관계 일동은 그동안 공공도서관 발전에 미온적이었던 관계 당국이 지금이라도 공공도서관을 없애는 우를 범하지 말고 오히려 공공도서관 발전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며 시민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와 일부 지방 교육청에서는 즉각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시도를 중지하고 기득권 유지 차원이 아니라 진정 국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나라의 장래와 국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명분을 지키는 올바른 정책기관의 모습을 되찾기를 요구한다.

1998년 11월 일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서지학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전국사서협회	한국문헌정보학회
전문대학문헌정보학과교육협의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한국도서관협회	